

노동현장 불법 관행 뿌리 뽑는다 체불임금·산업재해 개선 본격화

고용부, '고용노동 정책 성과·계획' 투명한 노조 운영으로 신뢰 강화
공정채용 제도로 구직자 권익 보호

고용노동부는 지난 2년 6개월 동안 법치 확립을 토대로 현장 노사관계 안정과 높은 고용률 등 가시적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12일 고용부에 따르면, 김민석 고용부 차관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고용노동 정책의 주요 성과와 향후 계획' 브리핑에서 체불임금과 산업재해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들을 지속해 왔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그간 산업현장에서 오랫동안 묵인돼 온 건설현장의 자조조합원 채용, 월례비 강요, 공사방해 등 여러 불법관행들을 개선해 왔다"며 "채용 불공정 해소를 위한 단체협약상 우선·특별채용 조항 시정과 타임오프 관련 법 위반 사업장 감독 등 현장에서 당면시되던 법 위반 사항을 지속적으로 바로잡아 왔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조합의 투명한 운영과 조합원·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조합원 세액공제와 연계한 노동조합 회계공시를 최초로 도입했다"며 "올해 공시율은 90.9%에 이르며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돼가고 있다. 투명한 노조운영이 지속되도록 회계컨설팅, 회계 감사비용 등도 지원할 예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용노동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근로손실일수와 노사분규 지속일수가 대폭 감소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급속, 보건 등 주요 산별노조 파업의 영향으로 노사분규 건수가 증가했으나, 근로손실일수는 과거 정부의 절반 이하로 줄었다"며 "노사분규지속일수의 경우 2015년 이후 가장 낮은 9.4일을 기록했다. 노사분규의 증감과는 별개로 노사갈등을 노사간 대화와 타협으로 조기 해결하는 관행이 현장에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임금체불을 '중대 범죄'로 규정하며, 이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제

재 강화를 통해 문제 해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김 차관은 "현장점검과 감독을 통한 즉시 청산지도, 대지급금·용자 지원 확대 등을 통해 9월 기준으로 체불금액 1만5224억원 중 77.9%인 1만1856억 원을 청산했다"며 "경제적 제재 강화와 함께 명단공표 사업주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적용 배제, 출국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이 개정됨에 따라 체계적으로 임금체불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고용부는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가칭)이 신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올해 정기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법 제정 이전이라도 노동약자의 애로사항을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예산사업도 확대 개편할 계획이다. 아울러 구직자 권익보호와 함께 채용절차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한 '공정채용에 관한 법률'을 당정 협업을 통해 올해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 차관은 "임금체불과 관련해 임금체불의 40%가 퇴직금인 만큼 퇴직연금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함으로써 체불을 미연에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며 "퇴직연금의 단계적 의무화는 보다 두터운 노후안정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연금개혁과 연계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세종=김대환 기자 kdh@metroseoul.co.kr

환경부, 국내 물 산업 해외진출 지원

대구서 16일까지 '국제물주간' 개최

환경부는 오는 13일부터 16일까지 대구시 북구 엑스코에서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2024'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대한민국 국제물주간'은 우리나라의 물 분야에 대한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국내 물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열리는 국내 최대 규모의 물 분야 국제행사다.

이번 행사는 모로코 설비·수자원부, 필리핀 환경천연자원부, 캄보디아 수자원기상부, 미국수도협회 등 각국의 물분야 고위급 인사를 포함해 전 세계 70여 개국의 물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경험과 기술의 공유를 통한 미래 스마트 워터 구축'이라는 대주제를 바탕으로, '디지털 물줄기: 물의 미래를 향한 항해'라는 소주제 아래 고위급 회의, 국제 학술토론회, 국내외 경연대회, 전시회 등 총 50여 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물분야 고위급 회의인 '워터리더스 라운드테이블'에서는 세계 물분야 고

위급 참석자들이 모여 기후변화로 인한 물 문제에 대처하는 방안을 공유한다. 국가간 정책과 기술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의지를 담은 실행선언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월드워터파트너십'에서는 세계물포럼을 개최한 각국의 대표들이 참여해 지난 5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제10차 세계물포럼'의 결과를 공유한다. 2027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개최될 '제11차 세계물포럼'의 방향에 대한 의견도 교환할 예정이다.

국내 물산업의 해외 진출과 교류 활성화를 지원하는 '물산업 광장(워터비즈니스 스퀘어)'은 국내 우수 물 기업 60여 곳이 참여하는 현장 전시회로, 공공 구매 상담회와 신제품 및 신기술 발표, 해외 구매처(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환경부는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및 캄보디아 수자원기상부와 유속측정장비 양여식을 개최해 캄보디아의 지속 가능한 물관리와 수문조사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양국 간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세종=김대환 기자

환경과학원 "악취 책임 소재 가린다"

환경부, 현장 악취 측정법 개정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오는 13일부터 현장에서 주변 악취배출원의 영향을 배제하거나 최소화하는 측정법을 추가해 개정된 '악취공정시험기준'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악취공정시험기준은 악취 측정 시 시료 채취와 분석 방법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악취를 측정할 때 측정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악취공정시험기준 개정은 ▲총칙(ES 09000.b) ▲정도관리 유의사항(ES 09002.b) ▲공기희석관능법(ES 09301.d) 등 총 7개의 항목에 걸쳐 이뤄졌다. 농도 계산 과정에서 중복된 내용을 삭제해 계산식을 명확히 하고, 용어를 통일하며 문구 오류를 수정해 참고

문헌과의 일치성을 확보했다.

두 곳 이상의 악취배출원이 밀집한 지역에서는 대상 배출원 외의 주변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공기희석관능법 시험기준에 시료채취자가 '다른 악취 발생원 등 사업장의 주변 상황'을 조사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시료채취 지점은 '다른 악취발생원의 영향을 배제할 수 있는 지점'으로 선정하도록 해 측정의 신뢰도를 높였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악취공정시험기준 개정의 후속조치로 내년 상반기에 악취측정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채취지점 선정방법, 생활악취 모의계산(모델링) 기법 적용방안 등을 담은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악취공정시험기준은 행정예고 및 전문가·관계기관의 검토를 거쳐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 /세종=김대환 기자

코트라, 두바이 경찰과 韓 첨단기술 협력

14일까지 '글로벌 수출테크 위크' 개최
한국 디지털 기술 수출 교두보 마련

두바이경찰의 디지털 치안과 보안기술 개발 등에 우리 기업들이 참여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코트라(KOTRA)는 11일~14일까지 나흘간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경찰본부 R&D센터에서 'KOTRA·두바이경찰 글로벌 수출테크 위크'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두바이 경찰이 필요로 하는 AI(인공지능)감시·감측, 딥페이크감지, 자율주행, 사이버보안 및 스마트치안 등 선행 기술분야 공동 개발과 협력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두바이 경찰은 앞서 지난해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강화를 위해 최신 ICT 기술력을 가진 미국 MIT 연구센터와 첫 행사를 공동 개최했다.

올해는 AI, 자율주행과 ITS(지능형 교통체계) 분야 높은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 기업과의 협력을 위해 코트라 두바이무역관에 이번 협력사업을 요청했다.

두바이 경찰은 각 분야별 협력 가능성이 높은 19개사의 한국기업을 직접 선별해 초청하고, 전시공간 일체를 제공하는 전례없는 지원을 하는 등 한국 기업의 기술력과 미래 협력 가능성을



코트라가 지난 11일 두바이 경찰과 함께 개최한 'KOTRA·두바이경찰 글로벌 수출테크 위크'에서 AI·자율주행 등 혁신기술기업이 전시 및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코트라

높게 평가하고 있다.

UAE는 지난 4월 세계 3대 AI 강국으로 도약을 표방하며, AI에 관한 두바이의 미래 AI 청사진을 발표한 바 있다. 두바이 경찰 역시 이에 발맞춰 상호작용형 무인경찰서인 '스마트 경찰서'를 시범 운영하고, AI 기반 기초신고상담 플랫폼인 버추얼 경찰관 '아르나(Arna)'를 운영하며 해당 분야에 지속 투자하고 있다. 이번 행사도 디지털·스마트 분야 치안 및 보안기술 개발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이번 행사에는 코트라와 두바이 경찰이 공동으로 관련 분야 유망 기업을 발굴했다. 노타AI, 테크트리노베이션, 에이리스, 요오인터랙티브 등 AI 기술 기반 장비·솔루션 제공 기업들이 다수 참석해 4일간 △부스 기술 상담

△디지털분야 주제 발표 △기술피칭(IR) △브레인스토밍 경진대회 등을 진행한다. 또 13일에는 코트라 두바이무역관과 두바이 경찰이 향후 기업지원과 협력행사 확대추진을 위한 MOU를 체결, 한국기업과 기관간 연구개발과 투자협력을 정례화할 계획이다.

박동욱 코트라 중동지역본부장은 "이번 행사는 세계 최고수준의 디지털 치안 및 교통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는 두바이 경찰과 한국의 혁신기술을 보유한 수출테크 기업들이 미래 교통시스템 선행연구와 기술협력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UAE와 한국간 디지털 전자정부 등 협력을 강화하고 우리기업의 중동시장 진출 확대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환자수 부풀려 요양급여 부정수급 '심각'

권익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국민권익위원회가 의료법 위반 공익침해행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 분야의 요양급여 부정수급 등으로 인한 공공재정 누수현상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권익위가 적발한 사례를 살펴보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사례 ▲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인력 수나 근무시간을 허위로 제출하여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사례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개설·운영하거나 ▲환자수를 부풀리는 사례 등 여러 방식으로 국가재정이 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소재 A내과 의원은 브로커를 통해 환자를 모집하고, 의사가 진료시

간이 끝난 저녁에 시술 장소를 제공해 모집한 환자에게 의료인이 아닌 자가 리프팅 시술을 진행했다. 또한, 의사는 '두피지루' 치료 행위를 했다고 속여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했다. 조직적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의사와 브로커, 무면허 시술사 2명, 가짜환자 100명 등 관련자 104명은 현재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환자 수를 부풀려 부정수급을 한 사례도 있다. 인천 소재 D한의원원은 3개월간 실제 163명을 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10배가 넘는 2472명의 환자를 진료한 것처럼 허위로 진료기록을 등록해 수 억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정하게 편취했다가 적발됐다.

/세종=김대환 기자